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임 유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교과에서 핵심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구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와 지향점들을 실현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와 지향점은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 상황에 대한 본질적 대전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불합리한 문·이과 구분을 통합하고 폭넓은 기초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되었지만, 그동안 학문적 체계에 종속된 각 교과의 지식 중심 교육에 역점을 두었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그리고 고입·대입 진학을 위한 선발의 기능으로만 관리되어 왔던 평가의 문제점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미비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또는 교과 내용 구성의 원리라고 제시된 ‘핵심개념’, ‘빅 아이디어’가 과연 21세기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량의 적정화, 학습경험의 질적 풍요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교육 내용을 상기하고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교과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만 가르치도록 하자는 진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모호하게 여겨진다. 학습의 내용 분량이나 전달 방법이나 여전히 학습의 결과적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보다는 학생의 자발적인 탐구와 문제 제기의 과정을 통한 학습력을 발달시키는 것, 즉 철저히 학습의 과정을 지향하는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원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이 교실 수업과 평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향점에 충실해지기를 바란다.

둘째,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한다는 식으로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가 도입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의 불일치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고등학교 3년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하고 모든 과목을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흥미와 희망 진로에 따른 소인수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대입전형에서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석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현재의 평가와 성적산출 방식은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역시 수업과 괴리되어 매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에서 학습의 결과적 목표보다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평가와 성적 산출에서 과목별, 교사별 절대평가의 본질을 분명히 살려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 출발의 취지에서부터 그랬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고입과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 활용 방식의 개선 등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 취지와 지향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문·이과 분절적이고 편중된 학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 수능시험 방식만 개선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교과목 편제만 개정하고 수능시험과 대입전형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의 성격과 운영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6개 공통과목의 성격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기능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통과목들이 ‘필수’ 과목의 성격으로 편성·운영된다면 학생과 학교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 취지와 중요한 지향점에 맞지 않는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위수 증감 또는 개설 여부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는 공통과목들 외에 다른 일반선택 과목들이 수능시험에 선택 시험과목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경우, 역시 다양한 학생 맞춤형 진로선택 과목들의 개설은 어려워질 것이며, 고등학교 교실 수업은 수능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들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충분히 다양하다고 보기 힘들다. 오로지 기존의 학문적 분류와 지식 체계 안에서 수준별로 단순화된 교과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종류도 제한적이고 과목명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수학 교과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등 위계성과 함께 내용적으로 분류된 과목들이 있는 것처럼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도 다양하게 내용과 수준을 분절하여 과목들을 개설하는 것이 꼭 불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국어나 영어 교과에서도 실용국어, 심화국어, 실용영어, 영어독해와 작문, 이런 식으로 과목명을 정하지 말고 범교과 학습주제 등을 포괄

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의 탐구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과목들을 개설할 수는 없을까.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단위학교에서 또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신설과목들을 확대 개설하는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반고에서는 다양한 교양과목, 직업과목, 대안교과목 등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수능시험을 위해 사교육 선행학습과 교실 수업에서의 복습 문제풀이에만 매달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수능시험을 위해 공통과목 수준의 반복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능시험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들에서 의미 있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대학에서도 그러한 학습 경험과 과목 이수 이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